

종합·해설

'세계 기록유산' 교과서 삭제 파동

최고 2011

- ① 안철수 협상
- ② '도가니' 충격
- ③ 기아차 질주
- ④ 영육의 5·18**
- ⑤ 야권통합
- ⑥ 부실대학 퇴출
- ⑦ 조선대 총장 선거 파문
- ⑧ 무상급식과 복지 재정난
- ⑨ 풍성한 국제행사
- ⑩ 가거도 방파제 붕괴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 기록들이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등재될 것이다.

남아프리카,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각국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세계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의 5월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방해 운동에 이어 정부가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삭제해 파문이 이는 등 한껏 동안 '환호'와 '공분'이 교차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지난 5월 광주항쟁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5월 관련 기록물이 지난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등재가 확정된 것이다.

기록물들은 항쟁의 당시 자료들이 '폭도'로 몰려 구속되고,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엄 군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장엄한 기록들이다.

여기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자료, 시민 성명서, 사진·필름, 피해자 병원 치료기록, 국회 자료, 국가 보상 자료, 미국 비밀 해제 문서 등 5·18 전에 과정과 흐름을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5·18 기록물은 부당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할 때 얼마나 비극적이며 반인권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신념을 지킨 광주 시민들의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들이 등재 방해 운동을 펴는 등 우여곡절이 적잖았다.

이들은 '남북한 군의 연합작전 아래 북한 특수부대원 600명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의 등재 반대 청원서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는 등 반대 운동을 펼쳤다.

친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지난 11월 또 한 차례 글을 겪었다.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폐별 때 '지침' 구성을 하게 될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하는 등 민주화 역사사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다.

또한 기존 현행 교과서 집필 기준에 민주화와 관련해 두 차례나 거론됐던 5·18은 아예 없애 광주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5·18 기념재단 등으로 구성된 '새 역사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 지역 범시민단체 연설회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끝에 광주의 5월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랑의 산타원정대

'2011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발대식이 14일 오후 광주 동구 무등육아원 앞마당에서 열렸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최삼영 어린이재단 광주 지역본부장과 원정대원들과 어린이들이 희망의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억 원 오갔는데… 석연찮은 디도스 수사

수상한 돈거래 공개 안해

경찰 수사 의혹만 키워

10·26 재보선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허페이

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 간 수상한 자금거래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지만 이 같은 행동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재보선 날 선관위와 박 후보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공씨의 접친한 선배인 박학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로 김씨가 총 1억 원을 강씨 등 공격범에게 전달한 사실이 14일 새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김씨의 경우 발각되기 가장 쉬운 급여 통장을 통해

거래했고 여타 관련자들도 모두 실명 계좌를 쓰는 등 범죄자금의 이동경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이 같은 자금 거래를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의혹을 키우는 틀이 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정치권 참고인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도 지나치게 꺼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른 참고인에 관한 내용은 매우 세세하게 언론에 공개해놓고 정치권 인사의 경우 피의자인 공씨가 최구석 의원실 소속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범행 전날인 10월 25일 1차 자리 참석자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김모씨의 신원을 알리지 않았고, 청와대 박모 행정관(3급)은 아예 참석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1차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크지 않지만 신원이 공개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 데 대한 의혹도 여전하다. 한정된 수사 기간에 공씨와 참고인인 김씨, 공성진 전 의원 비서 출신 박모씨의 진술에 의존해 서둘러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씨의 '정신적 조언자'라는 김씨가 선거 전날 술자리에서 범행 의사를 밝혔다는 공씨를 밝렸는데도 공씨가 끝내 공격을 감행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공씨가 술집에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지난 주말부터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해왔다. 경찰은 이들은 물론 2차 술자리에 공씨와 함께 있었던 피부과 병원장 이모씨와 변호사 김모씨, 검찰 수사관 출신 사업가 김모씨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디도스 특검·반값 등록금

민주당 조건부 등원 결정

자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광주시의 다목적 가속기와 도시gas 기술원, CT연구원 등 관련 예산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의 경우도 내년 F1대회 운영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비, 영암호 통선문 설치비,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비 등 짙지 짙지한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국회 복귀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 여부. 우선 여당은 민주당 강경파의 등원반대를 제압할 정도의 명분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모든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아 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광주시의 예산 관계자는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4년 연속 예산안 여당 단독 처리라는 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국민에게 예산안 합의 통과라는 올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

/박지경기 jkpark@kwangju.co.kr

'보좌관 비리' 이상득 검찰 소환 불가피

최측근의 거액 금품수수 비리가 드러난 한나라당 이상득(76)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가피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이 거액 코오롱그룹에서 데려와 16년이나 됐다. 두고 있던 것은 보좌관 박래수(46)씨는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자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총 7억 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박씨가 의원실 민원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데다, 계은돈의 출처를 숨기려고 의원실 부하 직원 4명의 계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돈세탁을 하고 직원들이 이에 가담한 정황까지 드러난 마당이라 이 의원에 대한 조사는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의원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부닥쳤다. 경찰이 이 의원과의 연관성을 의심한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등 미적발 경우 축소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자명한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검찰이 일단 이 의원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형식은 소환을 통한 징문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 다른 형식을 취한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친인이자 정권 실세라는 점 때문에 봄주기를 했다는 또 다른 논란을 낳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국비확보 숨통트이나

민주당이 14일 조건부 등원 결정을 내린다. 따라 광주·전남 지역 국비 예산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8년 이후 3년 동안 여당 예산 날치기 통과로 국회 상임위에서 어렵게 마련한 광주·전남 지역 국비 예산이 물거품이 된 데 이어 올해도



예산 국회 파행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야당의 등원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자는 것이 중론이었다"면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태' 특검 도입,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 등의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12월 임시국회에 등원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들은 또 원내대표단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등원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건관인 김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수용하고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등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등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

/박지경기 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세기보청기 대리점

전화번호

010-1234-5678

세기보청기 대리점

전화번호